

Career Guidance: A Handbook for Policy Makers

Summary in Korean

직업 안내: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서

국어 개요

직업 안내 서비스 체제를 원활히 편성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진다. OECD 국가와 유럽연합에서는 개개 시민의 고용성 증진을 위한 장려 정책과 더불어 평생교육 전략이 시행되는 중이다. 이같은 전략과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시민들이 각자의 교육과 고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질 높은 정보와 교육, 훈련, 근로에 관한 조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종종 직업 안내의 전달 방식과 공공정책 지향 목표 사이에 상당폭 괴리가 발생한다. 본 지침서는 OECD 국가와 유럽연합이 교육, 훈련, 채용 차원의 효율적인 직업안내 정책을 개발토록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 유럽위원회와 OECD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훈련·채용 정책 측면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지침서를 개발해 왔다. 한편 유럽을 2010년쯤 사회 통합을 이룬 세계 최고 지식기반 경제와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데 역점을 둔 리스본(2000) 목적이 시사하듯 이같은 변화는 유럽에 이미 표명된 바이다. 본 지침서는 OECD, 직업훈련개발 유럽센터, 유럽훈련재단 및 세계은행의 주도하 실시된 직업안내 정책의 국제적인 검토를 토대로 한다. 명료하고 단순히 말해, 정책입안자를 위해 본 지침서가 게재하는 교육, 훈련 및 고용 여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정책입안자가 직업안내 서비스를 공공정책 지향목표에 부응토록 보장하는 데 안게 되는 도전;
- 이같은 도전에 대응, 해결하는 데 이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의문사항;
- 평생교육과 적극적인 고용성의 테두리에서 이들이 직업안내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몇몇 선택권, 그리고;
- OECD와 유럽연합 국가가 실시한 효율적인 대응책 사례

본 지침서가 다루는 4 개의 일반 정책 주제 : 젊은층 직업안내 증진 ; 성인층 직업안내 향상 ; 직업안내에 접근성 강화 ; 직업안내 지원 체제 개선.

젊은층 직업안내 양상 증진

정책입안자는 젊은층 직업안내 동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의무교육, 고등학교, 고등교육 및 위험 젊은층에 관련된 도전 요소를 해결치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도전 요소로 직업안내 접근성의 격차 완화, 동 서비스의 성질, 수준정도 및 품질 제고가 대두된다. 학교의 주요 과제물로 : 적정 형태의 인적자원, 자본자원을 학교 내부와 학교 주위의 단체 양측에 충분히 공급; 이같은 자원이 직업안내 형성에 실제로 이용되도록 보장; 상존하는 자원의 최적 활용 등을 꼽힌다. 한편 직업안내 접근의 격차는 특히 초등학교와 직업진로상의 고등학교 차원에서 심화된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을 정식으로 강화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주안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직업관리능력을 습득하는 데 두며, 책임화 메커니즘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 정책 선택권 사항에 포함된다.

상당수의 젊은이가 자격증 없이 일찍 학업을 중단한다. 따라서 이들의 직업 세계로의 이전과 향후 추가적인 교육 시도에 유용할 사회단체 차원의 프로그램이 시급하며, 또한 선부른 학업 중단을 배제토록 직업안내를 보다 적극적인 일환으로써 교내 프로그램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학업비 부담이 학생, 납세자 모두에 상당히 가중되는데도 고등교육 등록생을 겨누는 직업안내 제공은 일반적으로 결여된 상태다. 따라서 고등교육 차원에서 제공된 직업안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같은 서비스 범위 확대를 보장하는 정책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 입안자의 선택권 사항으로 3차 산업을 겨누는 직업서비스 목표의 세부화가 있는데, 보다 명백히 말해, 고등교육에 공금조달 기준을 이들이 직업서비스의 수준정도와 품질 면에서 기록해 낸 성과에 연계시키는 것을 뜻한다.

성년층을 위한 직업안내 양상 제고

성질상 상당히 다양한 성인 계층은 정책입안자가 직업안내 서비스 제고를 추구하는 과정에 여러 도전을 제기한다. 성인층 고용자가 수월히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업 자체가 자사 고용자들의 직업 개발 요구에 응하는 경우는 드물다; 개인 부담으로 구입하는 사용자 요금 지불식의 서비스 제공은 그 범위가 아주 국한적이다; 고용주와 노조는 경쟁력 및 형평성 제고에 근로 인력 개발이 필수라는 것을 원칙상 종종 인정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직업 안내 서비스 제공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이러한 어려움이 도사리지만, 새로운 파트너십을 고용주 조직, 교육·훈련기관, 공공채용서비스 및 여타 관련 조직들과의 사이에 구축한다면, 근로장소와 노동인력에 관한 직업 안내의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직업 안내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절대 필요한 일부로서 향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안내는 실업 특히 장기 실업 상태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데 핵심 주체로써 간주된다. 이같은 방지에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채용서비스(PES)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PES 차원의 직업안내 서비스는 아직 미개발된 단계에 있다. 따라서 PES 와 개개 및 단체 위주의 안내 서비스 사이에 현지 교육·훈련기관과 더불어 강력한 협력 전략을 입지하게 되면, 실업인들은 고용 상태로의 전환과 교육 과정의 재참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국가의 인구 노령화와 연금 조달의 문제는 정년 연장과 더 유연한 퇴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입안자는 고령 근로층을 겨누

직업안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소홀히 했다. 한편 고용주와 노조의 대표자들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령층에 서비스 배달을 후원하고 이 영역에서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안내 서비스에 접근 증진

직업안내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한다. ICT 와 호출 센터를 활용한 더 유연한 서비스 배달 방식은 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촉진시킬 확률이 높다. 시민 모두가 직업안내에 접근하게 되면, 이 직업안내 서비스를 특정 위험 계층에 맞추어 부합시킬 필요가 종종 생긴다. 직업안내 정책 및 서비스의 고안, 계획, 집행 그리고 감시 과정에 실제 이해당사자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가담시키면 이들의 요구에 합당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직업안내 서비스의 접근을 보편화하는 데, 채용정보 자료의 품질과 적절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재 주어진 과제이다.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데에 있어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간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협력이 종종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민간부문이 개발한 자료는 어떤 승인된 기준의 규제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질 높은 직업정보가 시민에 전달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 및 국부 차원에서 계획된 직업안내 정보 행사를 여러 미디어(신문, TV 따위)를 통해 선정 대상 계층(젊은층, 고용자, 실업자)에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 출발점이다.

직업안내 지원체제 개선

시민에 제공된 직업안내 서비스는 품질과 형태에서 국내에서나 국가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직업중개인들의 교육훈련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지기 때문이다. 실로 이들의 초기 교육훈련 기간은 3 주에서 5 년 사이이다. 정부는 직업안내소 중개인들의 초기 교육훈련 내용 및 과정을 정립하고, 교육, 훈련 및 고용을 겨누는 공공정책의 지향목표가 추구하는 결과에 부합되게 교육훈련 내용을 도출시키는 데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려면 정부부처로부터 더욱 강력한 신호가 요구된다.

대다수 국가에서 직업안내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재는 주기적 및 체계적인 평가 사업은 거의 없다. 제공 대상인 서비스의 기준 잣대가 무실하거나 아니면 일부 부문에만 존재할 뿐 여타 부문에는 결여된 상태이다. 품질 구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은 의무적이기보다는 자발적인 성향을 띠고 지침서로써만 작용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직업안내 서비스 사용자는 동 서비스의 고안과 평가 과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직업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결정을 뒷받침해 줄 실증 자료는 아주 취약한 상태이다. 실로 직업안내 서비스 제공 혹은 이들이 공공정책 목표 달성에 보이는 실효성 따위의 전체 상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중에 보유한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부처가 직업안내 서비스에 공적 기금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출되는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다. 이 영역에 투입된 민간 투자와 지출에 관한 정보 또한 결여되어 있다. 이해관계자(사용자, 관리책임자, 사회 파트너, 중개업소 따위)간의 전국적인 협력은 적절하고 유용한 자료 유형의 선택과 직업안내 제공에 관여된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교육·훈련·고용 정책은 직업안내 목표를 미미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직업안내에 관한 실증 토대가 부적합한 것을 감안할 때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게다가, 직업안내 제공은 일관성 있고 통합된 계획보다는 서로 상이한 변천사, 원리 및 원동력을 지닌 교육, 훈련, 고용, 단체, 민간 부문 등의 각기 판이한 하부 조직에 종종 기인했기 때문이다. 직업안내 정책과 잇따른 제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전국적인 포럼을 통해 서비스 배달을 담당할 핵심 조직과 고용주와 노조의 핵심 이해관계 대표자들 양자를 대면시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아젠다의 역점을 책정, 개발하고 정책 입안을 강화시키는 데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직업안내 서비스 비용은 납세자가 거의 부담하고 있다. 향후 평생교육 전망은 이 서비스 제공의 적용범위, 영향력 및 다양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개인·민간 투자의 유도 능력에 부진한 양상을 보여 온 이 영역에 정부측의 새로운 재정적 도움과 개입이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공공 자원에 대한 요구가 민간투자의 활성화로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OECD 2004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 원문으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발간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온라인서점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 구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